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중국 괴질 亞 전역 확산 - WHO 경계령

폐렴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괴질'이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일대에서 인근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징후를 보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3일 전세계에 경계령을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형태의 폐렴이 나돌고 있다고 각국 정부에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까지 감염시키고 있는 이 질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WHO는 또 처음에 고열, 두통, 근육통, 목 아픔 등 독감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유사폐렴 환자들을 격리 치료해 의료진의 감염을 막아야 하며, 이런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자국 보건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홍콩 샤틀(沙田)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병원 의료진 50명이 원인불명의 독감에 걸렸으며 이 중 23명이 입원했다"고 발표했다.

링팍인(梁栢賢) 홍콩 위생서 부서장은 "입원한 23명을 대상으로 X-레이 검사를 했더니 8명이 광둥성 괴질과 비슷한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링 부서장은 "환자들의 조직 샘플을 WHO 연구센터로 긴급 후송해 병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1차 실험을 실시했으나 판명 불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이번 주 초 개인병원인 하노이프랑스 병원 의료진 26명이 괴질에 걸려 입원한 환자로부터 감염돼 병원이 아예 문을 닫았다.

한편 중국 광둥성 일대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이번 괴질로 공식 확인된 피해 규모는 사망자 5명과

감염자 305명이며 이중 의료진이 105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2003. 3. 13)

호스피스 제도화사업 본격화

매년 10만명 정도 발생하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을 덜어주고 상담 등 정신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호스피스 사업 모델, 관리기준, 하루 소요비용 등 호스피스 제도화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호스피스 시범 사업 기관' 5곳을 선정, 올해와 내년에 각 28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곳은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가정형),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병동형), 세브란스병원호스피스(산재형), 경기도 용인 샘물호스피스(시설형), 경기도 의정부의료원(공공형)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5곳의 시범기관에서 만들어진 '제도화 표준'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을 맡길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대 등 가톨릭 및 기독교계 병·의원 40곳과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24곳에서 호스피스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 3. 14)

'치매·중풍 노인' 국가서 보호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 등에 걸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요양보호 비용도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들을 요양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국가 차원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낼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학계, 보건·의료·사회복지 단체, 시민·여성단체, 연구기관 등 출신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말까지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 실행모형을 개발, 2006년까지 시범사업과 법령 제정을 끝내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중풍 등에 걸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현재 83만명에서 2020년 15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들을 요양보호 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현재 2조 1,607억원에서 2020년 5조 6,007억원으로 2.6배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그 비용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료 요양시설은 한달 100만~250만원, 노인병원은 한달 100만~120만원, 전문요양 시설은 한달 62만원, 일반 요양시설은 한달 32만원 정도 받고 있다.

추진기획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노인 요양보호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03. 3. 17)